

5월단체에 110억 구상권...광주가 시끌

문화전당, 옛 도청별관 공사 지연 손배소송 검토 파문 확산 5월단체 반발 "도청복원 찬물 끼었나...정부 대응적 해결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측이 5월 단체 등을 상대로 110억원에 달하는 구상권 행사(손해배상청구 소송)를 검토하고 있다(광주일보 2018년 8월30일자 1,3면)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5월 단체 등은 '옛 전남도청 조기 복원을 촉구하는 5월 단체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문화전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대응적으로 구상권 행사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30일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옛 전남도청 별관 존치 농성과 관련한) 구상권은 정부가 별관 보존을 결정하면서 함께 철거했어야 함에도, 이제와서 갑자기 소송 제기 운운하는 것은 너무 아비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문화전당측이 5월 단체에게 방안이나 의견을 먼저 제시해 입장 차를 좁혀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만, 정부기관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5·18 관련 단체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대통령·장관만 바뀌었지 문화부와 문화전당의 실무진은 그대로 있었다"며 "5월 단체들이 옛 전남도청 복원 농성을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며 지금까지 쉬쉬해놓고 이제와서 구상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문화전당측에서 아직 구상권 문제와 관련해 공식적인 연락은 받지 못했다"며 "이미 정부로부터 옛 전남도청 복원 약속을 받은 이상 5월 단체는 특별한 대응 없이 문화전당의 움직임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측은 공식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단체의 관계자는 "소송 검토는 옛 전남도청 복원이라는 지역사회 염원을 무시하는 처사로 정당한 주장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시민단체와 문화전당측 실무진간 대화에서는 '지역사회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는데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옛 전남도청 복원기본 계획 용역이 시작돼 복원의 첫발을 내디뎠는데 구상권 문제도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시민단체 내부적으로 강하게 항의하는 문제를 포함해 대응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자칫 옛 전남도청 복원약속과 의지를 스스로 희석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허달용 광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 회장은 "문화전당측이 구상권

을 청구하면 정부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신을 가중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약속한 옛 전남도청 복원약속의 정신을 부정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 문화단체 등은 광주시, 지역 정치권이 나서 구상권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이기훈 상임이사는 "정부가 대응적으로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논란을 매듭짓고 문화전당 활성화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등을 새롭게 챙기고 있는 시점에서 구상권 문제가 또다른 약제가 돼서는 안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국고손실에 따른 책임을 문화전당측과 관련자 등에게 지우지 않도록 5월 단체와 시민 사회에서 노력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며 "광주시와 의회, 국

회의원 등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중재하는 하는 등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전당측은 지난 2008년 옛 전남도청 별관 존치 논란과 관련해 5월 단체 등을 상대로 1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5월 단체들의 장기간 별관 점거농성 등으로 문화전당 건립 공정에 차질이 빚어져 업체에 해당 금액을 몰려준 만큼 국고손실의 책임을 가리켰다는 내용이다.

대립산업 등 4개 업체는 공기지연을 들어 문화전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10억원을 받아냈다. 현재 문화전당은 "손해배상관 관련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았으며,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출산 축하 아기양말 드려요

30일 광주시 북구 일곡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정현득)에서 출산축하 아기양말 나눔 이벤트가 열렸다. 센터 관계자들이 출생신고를 마친 부모에게 선물할 양말세트를 준비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민주화 보상금 받았어도 국가배상 청구 가능"

현재 민주화보상법 위헌 결정...5·18유공자 배상 영향 주목

'패킷 감정'은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 보상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여전히 청구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 5·18 유공자들의 추가 배상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A씨 등이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 18조 2항이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 등 38건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1978년 중앙정보부 지시에 따라 동일 방식에서 해고된 A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6월 해고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결정하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중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에 동의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고 A씨는 헌법소원을 냈다.

민주화보상법은 보상금 지급 결정을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법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면 판결이 확정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해 현재는 더 이상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현재는 "민주화보상법상 보

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적 손해에 관한 국가배상청구권마저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라고 판단했다.

다만 민주화보상법의 적용 범위에는 5·18이 제외돼 있기 때문에 5·18 유공자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지역 법조계는 5·18 유공자의 보상 근거가 되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6조 2항)에도 민주화보상법 18조2항과 똑같은 조항이 있기 때문에 5·18 유공자들이 헌법 소원을 내면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다.

한편, 현재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은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정했다. 현재는 이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긴급조치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 등 54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결정이란 적법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본격적인 심리 없이 종결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헌법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심사를 하더라도 헌법에 어긋나지는지를 판단할 수 없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는 국경일 인터넷회선 '패킷 감정'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교사 폭행 행정실장 면죄부"

전교조, 교육청에 각성 촉구

전교조 광주지부는 30일 성명을 내고 "광주 모 여중 행정실장이 도서관 담당 교사를 밀치고 욕설을 했는데도 적절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사 폭행 사립 행정실장에 면죄부 준 교육청은 각성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지난 6월 광주 모 여중 도

서관에서 행정실장과 도서관 담당교사가 시설 개선 문제로 다투던 중 학생들과 동료들이 있는 앞에서 행정실장이 욕설을 퍼부으며 교사를 폭행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하지만 사안이 중대함에도 교육청은 현장방문 없이 조사를 종결하고 경징계를 요구했고 학교 법인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교육 당국이 교권보호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여고교사가 제자와 성관계...성적조작 의혹도

광주교육청 감사·경찰 수사

광주 한 여고 기간제교사가 1학년 여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교사가 여학생의 성까지 고쳐줬다는 의혹도 제기돼 교육청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30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모 여고 기간제 교사인 A씨(36)가 1학년 B양(16)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1학년을 담당하는 교사 A씨는 옆 반 학생인 B양과 친분이 쌓이자 지난 6월부터 자신의 차에 태워 신체접촉을 한 후 최근까지 몇 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5~26일 A씨와 함께 서울에서 머물렀던 B양의 할머니 집에서 자다고 가족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것이 들렸나면서 드러났다.

또 A씨가 1학기 기말고사 한 과목의 답안지를 B양에게 주고 틀린 답안을 고치도록 했다는 얘기도 B양이 가족에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 가족의 항의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학교 측은 지난 27일 교사 A씨와 계약을 해지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A씨는

강제로 성관계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학교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으며 경찰도 B씨를 조사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성적조작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질 것이다. 성 관련 사항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만큼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5분 초과로 주차비 더 낸 60대, 주차장 출입구 막고 '행패'



○...주차시간이 5분 초과돼 1시간 주차비용을 더 낸 60대가 업체에 항의하며 자신의 차량으로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경찰서행.

○...30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김모(61)씨는 지난 29일 오후 6시20분께 광주시 북구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자신

의 스포티지 차량을 주차장 출입구에 30분간 정차시켜 교통 혼잡을 빚게 했다는 것.

○...김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는데 경찰에서 "주차장 업체가 단 5분만 초과돼도 1시간 비용이 결제해야 된다고 해 순간 화가 났다"며 선처를 호소.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 무안 기업도시보다 부동산 투자 가치가 훨씬 높은 곳!!

개발 공사가 진행중인 광주인접 국가산단에 투자하거나 공동중개 하실분 상담환영!!

(주)가은중개법인
062-225-0312

